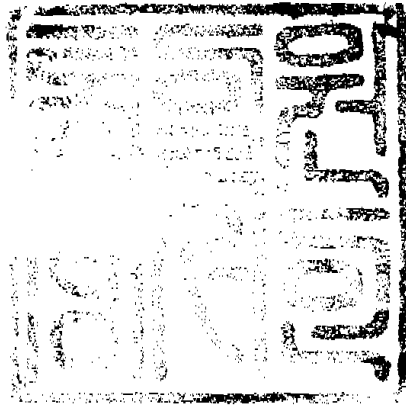


정책참고자료('91. 6)

向後 5年間の  
日・北韓關係를 展望해 본다



統 一 院

본 자료는 일본 慶應大學 교수이며 북한문제 전문가인 오꼬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의 최근 저서 「日本と北朝鮮これからの 5年」(東京：PHP研究所, 1991)중에서 제 4 장과 제 5 장을 발췌 번역한 것이오니 통일 및 북한문제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91. 6

統一院 統一政策室

日本과 北韓  
- 앞으로의 5년 -

小此木政夫

(오코노기 마사오)

---

1. 韓半島問題와 美·中·蘇의 속셈

냉엄했던 한국의 반응

일·북한 국교교섭의 개시에 대한 한국측의 반응은 처음에는 상당히 냉엄한 것이었다. 가네마루 前부총리는 평양을 방문한 다음, 10월 8일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노태우대통령과 회담했는데, 가네마루에 대한 한국측의 대접은 매우 냉담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가네마루 정도의 실력자가 방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에서는 누구하나 공항에 마중나가지 않았으며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를 선도하는 페트롤카도

붙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대사관 차가 선도 하여 대통령관저로 가는 형편이었다.

한국측으로서는 가네마루의 방북은 어떻든간에 그것이 일·북한 국교교섭 개시라는 상황으로까지 급속하게 진전되리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 국교수립같은 것은 한 2~3년 더 기다려 주었으면 싶었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할 터이었을 텐데 약속이 틀리지 않은가 하는 기분이 강했던 것이다. 물론 북한측이 국교정상화를 제안해 올 것이란 점은 가네마루를 포함하여 일본측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를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한국측은 급속한 사태의 진전을 의혹의 눈으로 보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일본의 안이한 양보를 두려워하는 한국정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일·북한간의 국교수립 그 자체에 반대인가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일·북한간

에 국교가 수립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경우 역시 교차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한국으로서도 플러스가 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일·북한 국교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본측이 원칙적인 문제에서 양보를 함으로써 그것이 남북대화라든가 한국의 북방외교에 방해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네마루에게 분명하게 말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최대공약수적인 견해이며 그것이 노태우대통령의 냉담한 반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교섭이 시작되더라도 일본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linkage)시킨다는 원칙을 지키고 나간다면 이윽고 북한측이 양보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일 양국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전략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1991년 가을의 UN총회를 전후해서 남북한 사이에서는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이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핵사찰 그리고 남북대화의 문제에서도 일본측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요긴하다. 이러한 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하고 말면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 한국여론의 감정적 반발

이같은 한국정부의 반응은 비교적 합리적인 것이며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과 매스미디어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약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우선 첫번째 반응을 보면 북한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여서 머지않아 한국과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경제협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남북간에는 경제교류의 길이 트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북한에 손을 뻗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소극적이 되고 그러한 가능성은 당분간 연기되고 말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찌면 이같은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는 반대하기 때문  
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과 교섭을 시작했는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간 자기본위의 발상이 아닌가  
하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무릎을  
꿇고 경제협력을 청하기를 꺼려하여 마침내 일본과  
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마치 1960년  
대 전반의 박정희대통령이 북한에 무릎을 꿇는 것만  
은 참을 수 없어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의 길을 걸  
은 것과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측으로서는 일본과 한반도와의 사이의  
「불행한 과거」는 한국과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북한과의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상대방에서 국교정상화라는 제안이 나왔을 때 일본  
측이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불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정말로 자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그렇게 되는 것이 한국으로서  
정말로 이로운 것인가는 의문이다. 10년후라면 또  
모를까 현재의 한국경제의 규모로는 아직은 자멸한

북한을 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수백억달러에 이를 「통일비용」을 한국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더구나 설사 북한에서 김일성정권이 붕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으로 진전될 지 어떨 지는 의문이고, 또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한국에까지 파급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자멸의 과정은 루마니아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루마니아와 한반도의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경우는 분단국가라는 사실이다. 만약 북한안의 내전이 한국에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제 2차 한국전쟁이 될 것이다.

둘째 반응으로서 일·북한간에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에까지 미치게 되며 일본은 남북 쌍방을 「분할해서 통치할 수 있게」된다는 감정적인 이론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증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인만큼 이러한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든 북한이든 한반도의 주변에 4대강국이 둘러싸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 4개국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이를 상쇄(相殺)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한반도 전체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만들면서 이를 4대국의 교류와 상호의존의 무대로 만드는 식의 발상이 앞으로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45년전의 한국과는 달리 남북의 인구를 합치면 7,0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4대국의 협조를 촉진하면서 「통일·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럴 경우 일본의 영향력만을 배제한다는 발상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좀 더 성숙한 반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협조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국제적 협조

가 문제가 되는데 냉전시대에는 동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거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한 중국·소련 사이에서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해의 대립이 심각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되고 중소관계가 정상화된 현재의 상황은 국제적인 협조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1989년 2월의 미·소외상회의 이래 한국문제는 미 소간의 지역문제협회의 한가지 의제가 되어 있으며 중국과 소련사이에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북경을 무대로 하여 1988년말부터 대사관 수준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당 그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한반도문제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일본·미국의 3개국 사이에서 밀접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데 최근에는 일본과 소련사이에서도 외상 수준에서 한국문제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서 각국의 역할분담이 차츰 명확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든가 장래의 공동행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테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노태우·고르바초프회담은 분명히 미국이 한국과 소련간의 중개인 역할을 맡아서 구체화된 것이다.

### **외과의·한방의·협박자·유혹자**

현재 각국이 맡고 있는 역할을 그 성격에 따라 정의한다면 소련은 외과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냉전의 종결이라는 상황에서 지난날의 온갖 응어리를 단숨에 외과수술하듯 잘라내고 약간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향해서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역할은 한국의 북방외교를 가속화시켜 일·북한 국교교섭의 개시라는 구체적인 성과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똑같은 의사이기는 하지만 한방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련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환경을 개선·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결코 다른 나라에 앞서서 현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단단히 썰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맡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못하게끔 동맹국으로서 억제하는 역할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안정제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협박자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라든가 「핵의혹(核疑惑)」의 해소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장은 계속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로 밀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4대국중에서 오직 미국뿐이다.

끝으로 일본이 맡고 있는 역할은 바로 유혹자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현명하지도 않다. 다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만은 맡을 수 있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유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일·북한 국교개시를 반기는 소련

다음에 이들 각국이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혹은 일·북한 국교개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다.

우선 소련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하는 「외과수술」에 의해서 아시아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일·북한국교에는 쌍수를 들어 찬성하고 있으며 그 「연출자」라고도 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크게 보면 쉰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도 대비할 수 있는 쉰아시아안보협력회의(CSCA)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소련은 아시아의 각 지역별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장래 그것을 전아시아적인 규모에서 엮어놓고 싶은 것이

다.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1993년에 아시아의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2+4」에 의한 한반도정세의 안정화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일·북한 국교교섭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소련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짐을 벗어서 일본에게 대신 지게끔 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여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여러나라를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현재의 소련에게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될수록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중대한 포인트였다. 그것 없이는 자기 나라의 경제재건도 불가능한 판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협력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남북한 쌍방과 동시에 국교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에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자는 그 의견에는 반대이다. 한국과의 국교수립이라는

카드를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앞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등거리외교」이다. 물론 북한은 대외무역의 60% 가까이, 석유의 70% 가까이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북한은 소련의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발하여 소련의 행위를 배신이라는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소련은 지난날과 같은 동맹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국가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미국·소련의 3각 결탁관계」라는 비난이 북한의 공식 보도기관에서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인가 하면 그것도 국교수립 이전의 이야기일 뿐 그 이후로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얻은 3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전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소련

냉전종결이 가져온 최대의 변화는 소련으로서는 아마도 북한이 지닌 안전보장상의 가치저하일 것이다. 전처럼 미국과 적대하여 일본·미국·한국의 「3각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청은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아시아안보협력회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남북한 및 한반도주변 4개국간의 국제적 협조이다. 정치·경제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그것을 안전보장의 문제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소련의 기본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한국과 소련의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모스크바 선언」중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익의 밸런스과 자결에 입각하는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든가 「양국 및 다국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평화와 건설적인 협력적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한·



소관계의 발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 그 지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평화에 부응하며 아시아에서의 대결적인 사고방식과 냉전의 종결을 가속시켜 지역협력에 기여하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한다」는 문언(文言 message)이 들어 있는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여기서 「전아시아안보협력회의」같은 말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보협력회의의 구상이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소련으로서도 북한과의 안보협력도 어느 정도 계속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의 안전보장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데탕트를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또 남북한 쌍방에 영향력을 보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면서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신뢰조성을 촉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 지역에서의 군축·군비관리, 주한미군의 철수, 비핵평화지대화구상 같은 것이 소련의 앞

으로의 안전보장정책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은 정책방향 속에서 북한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들어주어 가면서 소련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 주시해야 할 중국의 거동

중국은 일·북한 관계정상화의 움직임을 기본적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한·소관계의 수립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소련과의 입장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동맹국이라는 입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북한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무역대표부를 서울과 북경에 상호 개설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교차승인에 의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교묘한 조타술(操舵術)으로써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 한동안은 강화되어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어 갈 것이다. 소련이 한국과의 국교수립이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오래전부터의 동맹국인 중국과 새로운 친구인 일본에 의존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김일성은 가네마루와의 회담에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문제를 일본·중국·북한의 관계강화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증거이다.

또한 앞으로의 외교일정을 볼 때 한국의 UN가입 신청이 중대한 문제로서 클로уз업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행사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외교적 입장은 여기서도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한국측이 중국과의 연내 국교수립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사이에 끼고 한국과 북한이 맹렬한 줄다리기를 벌인다는 상황이 앞으로 한두해 계속될 것 같다.

## 중국의 입장을 보는 네가지 시점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 대해서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정경분리라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수준에 한정시키고 외교관계는 맺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과 북경에 설치된 무역대표부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무역사무소에 지나지 않으며 그곳에 영사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하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무역사무소 관계는 일본·중국간의 경우로 말한다면 LT무역 당시의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된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경분리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첫째 이유는 중국 자신의 통일문제 즉 대만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이 「1국가 2제도」의 통일원칙을 포기하고 조선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 존재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하는 이론이 성립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대륙과의 관계가 미묘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으로서는 중요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소련이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한다는 것이 부활하는 것에 논리적인 근거를 주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천안문사건과 뒤이어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아시아의 사회주의 각국의 연대는 더욱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견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북한·베트남·쿠바 등 몇 나라 뿐이다. 천안문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이를 「화평연변(和平演變)」, 즉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정권의 내부전복시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것을 「반혁명폭란(反革命暴亂)」이라고 규정했던 것인데 이와 똑같은 말을 북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국·미국·소련의 「3각결탁관계」에 의해서 북한내에서도 똑같은 「반혁명폭란」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제국주

의자에 의한 「평화이행」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으로 인해서 중국은 쉽사리 북한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 동서간의 냉전이 종결되고 중·소관계도 역시 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현실에는 변화가 없다. 장래의 중국의 안전을 생각할 때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정권과의 우호관계는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베트남관계의 대비(Analogy)로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출현하여 통일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그것이 중·월분쟁으로까지 변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악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과는 좀 이질적인 것으로서 넷째로 한국전쟁의 기간중에 형성된 중국과 북한의 군인들 사이에서 맺어진 긴밀한 관계 즉 「전우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진기위(秦基偉 Chin Chiwei 1914~ )

국방상과 지호전(遲浩田 Chi Haotian) 인민해방군총참모장 등은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웠고 현재 중국군의 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군대 인맥에는 예상 이상으로 뿌리깊은 것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정치에 있어서도 군사에 있어서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수뇌레벨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며 그같은 인적 관계의 존재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즈음하여 한국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이를 촉진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간부레벨에서의 우호관계에 의해서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흥미있는 도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머지않아 중국도 정경분리를 버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 이들 네가지 이유가 절대적인 것인지 어떤지는 의문이다. 어느 것이나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국 정경분리라는 태도에는 장차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대만문제인데 중국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두개의 한국」 = 「두개의 중국」이라는 사태가 되어 미국과 일본 및 소련이 대만을 승인하는 것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반도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과 조그마한 대만이란 인상이 강하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조리 국교를 단절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제적인 고립화는 명백하다. 최근에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대만의 우호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며 필리핀과의 관계개선도 진전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의 국교수립이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한층 촉진할 것은 명백하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연대」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공통항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똑같은 사회주의이기는 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대외 개방이라든가 경제체제개혁을 촉진하려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양자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한·소국



교수립 이후인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연형묵(延亨默)총리를 심천(深圳 Shenchen)에 초대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여 개방·개혁노선의 정당성을 호소한 것도 중국의 지도자들이었다. 강택민(江澤民 Chiang Tsemin) 총서기는 그때 「사회주의의 정치공작을 잘 하면 개방·개혁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여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대외개방이라는 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을 그같은 노선으로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천안문사건 이후의 중국이 근대화노선에 복귀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탈출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사회주의국가의 연대」를 유지할 필요성도 희박해져 갈 것이다. 단 덩소평(鄧小平 Teng Hsiaoping 1904~ )이후의 문제는 남지 않을 수 없다.

안전보장상의 고려는 지정학적인 것인 만큼 쉽사리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일의 중요성이 저하해 나갈 것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종결

이라든가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악화라는 좋은 조건도 작용하여 한·소 국교수립에 이어 일본과 북한간에도 국교가 수립되어 다시 UN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다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은 정치·외교적인 수단에 의해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한반도판 「2+4」의 성립과정은 단계적이어서 우선 소련과 일본에 이어 UN에의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발판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북한과 한국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연계플레이처럼 진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대화가 진전되면 중국은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남북한사이에는 정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만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쌍방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이 앞으로 2~3년중에 진전되지 않을까?

##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다섯가지 조건

미국의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북한이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따라서 미·북한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 1988년 10월에 미국은 ① 외교레벨에서의 북한과의 접촉개시 ② 비정부레벨에서의 북한주민의 미국방문 장려 ③ 미국시민의 북한여행의 촉진 ④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물자의 대북한수출의 허가라는 네가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외교레벨에서도 1989년초부터 북경에서 중립적 상황아래서 양국 대사관의 참사관레벨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다섯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진정한 남북 대화의 촉진 ② 국제원자력기관(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협정조인과 실행 ③ 테러반대를 확실하게 하는 신뢰할만한 보증 ④ 신뢰조성조치 ⑤ 한국전쟁에서 행방불명이 된 미국병사의 유골의 정기적인 인도 등 다섯가지 점에 대한 기

대를 표명했던 것이다.

더구나 1990년 7월의 앤더슨 국무성 부차관보의 의회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항목은 미·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상호주의적인 프로세스」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어감에 따라서 미·북한관계가 개선되어 그 과정에서 미국의교단의 평양체재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경계하는 미국**

이들 몇가지 조치중에서 최근 미국측이 특별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관에 의한 북한 원자력시설의 사찰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극비리에 핵무기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갑자기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약간 설명한다면 북한은 1985년 12월에 핵확산방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조인하고 소련으로부터 연구용의 소형원자로 2기를 도입했는데 그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

자력기관과 전면적인 사찰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NPT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플루토늄생산을 가능케 하는 핵재처리공장의 건설을 완료했다는 정보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용 핵무기개발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1990년 2월이래 미·소외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의혹이 급속하게 클로уз업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있는 것은 냉전 종결후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미국의 인식변화이다. 물론 미국의 전략은 지금까지는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왔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저강도분쟁(低強度紛爭 LIC : Low Intensity Conflict)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인 불안정성이 주요한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추측이 강해지고 있다.

이 저강도분쟁이란 반란, 조직된 테러리즘, 준군사적인 범죄, 파괴활동 및 평화와 전쟁사이의 온갖 형태의 무력분쟁의 총칭이다. 1988년 1월에 발표된 미국대통령 통합장기전략위원회의 「선별적 억지」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경제적 압력에 기인하는 불

안정, 제 3 세계에 있어서의 폭력, 병기의 확산, 반란,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같은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 침략과 걸프전쟁의 확산에서 보듯이 제 3 세계의 일부 국가들에 대한 대량의 근대무기의 확산의 결과 지역분쟁이 종래와 같이 저강도분쟁에 머물지 않고 매우 고강도의 무력분쟁으로서 광범한 지역에 다대한 전화(戰禍)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경우 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장거리미사일·핵무기 및 화학무기(「貧者의 핵무기」)의 확산이다. 따라서 걸프전쟁 이후 로엔 국방차관보의 「만약 대규모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디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일 것이다」라는 증언이 더욱 더 진실감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확산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다. 10월 30일, 리처드 솔로몬 국무차관보는 「90년대의 아시아의 안전보장」이라는 테마의 캘리포니아대학에서의 강연에서 「한반도의 핵확산이 동아시아의 첫째 위협

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그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의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국내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비난받았던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 「종이호랑이」의 가능성도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소련이나 중국의 외교루트라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정말로 핵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관해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이 정말로 핵개발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에 존재하는 핵개발을 위한 설비라는 것은 「종이호랑이」이든가 아니면 극히 초기단계의 것에 불과하며 북한은 그것을 대미교섭을 위한 외교적 카드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점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철수를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부려왔던 북한이 「핵의혹」을 외교카드로서 이용하여 대미직접교섭을 실현하려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사실 효력발생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1990년 7월에 핵확산방지조약이 요구하는 보장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고 북한은 미국이 「핵의 위협을 해소하여 우리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찰위성사진이 북한의 핵개발시설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 시설의 알맹이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떻든간에 핵개발의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문제이며 북한에게 요구한 「핵위협의 해소」라든가 「법적인 보장조치」가 쉽사리 실현되리라 고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의혹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서 오히려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기만 하면 미·북한 관계개선이 상당한 정도로까지 진전될 것은 확실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겨진 최대의 문제인 남북대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성과도 북한측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북한측은 언제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 한·미 안보관계의 장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검토해 볼 때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한·미안보체제의 개편이다. 부시대통령은 1989년 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도 한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미군주둔계속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990년 4월에 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프레임」에 의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 방침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전방전개라든가 공동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효율적 삭감을 추진하면서 그 역할을 3단계로 나누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제 1 단계는 19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에 공군 2,000명, 지상군 5,000명의 합계 7,000명이 삭감된다. 또한 제 2 단계는 1993년부터

시작되는 3년간이며 이 시기에 북한의 위협을 재검토하여 한국군의 군사력향상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 2사단의 재편성을 검토한다. 이것이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제 3 단계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한국군은 자국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억지력의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을 더욱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미안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993년부터 95년까지의 3년간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즉 1992년까지 북한측이 핵개발의혹을 해소시키고 남북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게 되면 1993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 예상된다. 그후 즉 1995년 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미공동방위태세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분화(機能分化)」의 방침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심볼로서의 역할이 농후한 1개여단 정도의 지상군 및 한국군의 약점인 정보수집능력과 전술항공전력에 한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2000년 이전 즉 김일성주석이 건재한 동안에는 상정되어 있지 않다. 그때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의 해소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신뢰조성과 군비관리가 상당한 수준에까지 진전되고 또 한반도의 정치정세가 안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두드러지게 저하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월포비츠 국방차관이 증언하고 있듯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990년대는 중대한 변화와 잠재적 불안정의 10년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걸프전쟁은 냉전종결후의 지역분쟁과 정치적 독재체제가 결합한 경우의 위협성을 새삼스럽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 2. 앞으로의 시나리오

### 일·북한 국교교섭을 보는 시점

1990년 9월말의 한·소 국교수립에서 촉진된 것 같은 형태로 남북한의 총리회담이 시작되고 일·북한 국교교섭도 시작되었다. 그때 이후 한반도에서는 한·소협력, 일·북한 국교교섭, 한·중접근, 한국의 UN 가입신청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접전과 총리회담을 중심으로 하여 노태우·김일성회담을 겨냥한 남북대화사이에서 왕복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시점을 바꾸어 보면 이것이야말로 남북간의 정치적 타협의 프로세스이다. 그중에서도 일·북한교섭과 남북대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대일 「조기국교수립」제안도 그와같은 왕복운동속에서 얼마쯤은 영똥하게 생겨난 것인데 그런만큼 북한으로서는 그것은 건곤일척(乾坤一擲), 즉 이판사판의 「외교적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상되고 있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가네마루·다나베 대표를 맞이하는 북한의 빈틈없는 준비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일·북한 관계정상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잊혀놓은 채로 있었던 결과 일본은 의도하지 않고 북한의 운명을 거머쥐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교섭이 시작되던 경위라든가 그 내용으로 보아 북한측이 국교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 일본에 온 김용순(金容淳)서기는 「연내국교수립」을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의 국제적 고립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 탈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북한의 입장이 더욱 더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북한 국교교섭이 이대로 2~3년동안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수습할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입고 말 것이다.

한편 제18 후지산마루(富士山丸)의 선원 2명의 석방이후 일본측에는 교섭타결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추이와 남북대화 의 진전」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교섭을 진행시키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국교교섭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는 아마도 앞으로의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북한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북한

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청구권·경제협력」문제의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목적은 교섭을 지연시키는데 있지는 않다. 또한 일본이 한·미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일·북한 국교 교섭을 남북대화의 진전이라든가 IAEA의 사찰과 연계시키는 방침을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 일·북한교섭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여 한반도판의 「2+4」를 준비하는 방향에서 작용할 것이다. 그와같은 방침을 관철하여 북한측에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 것만이 냉전종결이라고 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일본이 한반도정세의 안정화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91년 1월의 한·일수뇌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일·북한 관계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와같은 인식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아마도 당초 북한은 우선 일·북한교섭을 진전시켜 거기서 이룩한 외교적 토대위에서 남북대화에 나서려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팀 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연습)를 이유로 남북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사이에 대일외교공세를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에 반발할 것은 명백하며 일·북한교섭은 서울·동경·평양의 3자의 게임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섭의 과정에서 일본은 항상 우호적인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단독으로 UN가입을 신청한 경우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접전속에서 일본의 명확한 의사표명이 요구되게 될 것이다. 91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한 가이후(海部)수상에 대해서 노태우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UN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명백한 방침을 관철하는 것만이 북한측의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고 오히려 일·북한교섭의 조기타결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청구권·경제협력의 타결점은 어디인가**

2국간교섭에 대해서 본 경우 가장 곤란한 것은 물론 청구권·경제협력의 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0년전의 한일국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난항(難航)했다. 북한측이 「조기국교수립」을 제안한 최대의 이유의 하나가 거기 있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를테면 1981년에 시작된 제 5 공화국의 40억달러 차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과서문제를 중간에 끼워놓고 2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측은 당초 100억달러의 정부차관(ODA)을 요구했고 그것이 60억달러에서 다시 40억달러로 내려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측은 수상관저와 외무성·대장성(재무성)의 3자간 협의로 금액을 산정하여 처음에는 20억달러이었던 것을 40억달러까지 늘렸지만 ODA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18.5억달러 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 올 것인지는 추측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현재 50억달러 이상의 대외채무를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금액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고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측은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의 금액에 준거한 형식으로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무상공여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5억달



리가 청구권·경제협력자금으로서 제공되었고 그밖에 상당액의 민간자금이 이전되었던 것이다. 이 청구권·경제협력자금 5억달러라는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등을 감안하여 아마도 현재 금액으로는 20억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일본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북한측의 제시 금액은 큰 격차가 있으며 그 격차의 조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 먼저 그 금액을 제시하든간에 북한측이 제시한 금액을 동경으로 갖고 돌아와서 수상관저·외무성·대장성 사이에서 조정하여 그 금액을 북한측에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상태가 몇번에 걸쳐서 되풀이될 것임은 거의 틀림없다. 최종적인 정치판단으로 일본측의 제시액을 어느 정도까지 더 얻을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후 45년의 손실」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북한측의 국내적 설명을 위해서라든가 어찌면 많은 거액의 「보상」을 획득하고 싶었던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섭이 타결될 때에는 명분은 별로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 최대의 문제는 역시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

액일 것이다.

쌍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교섭이 도중에 결렬된다는 사태도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일회담은 사실상 7차에 걸쳐 14년을 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곤란한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 북한측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자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가의 개재(介在)를 획책하려고 들 것으로 보인다. 이 교섭을 2~3년 끌고 나가는 것은 북한측으로서 는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 「공동선언방식」에 의한 결판도

이같은 북한측의 사정상 일·북한교섭을 조기타결시킬 필요성이야말로 남북대화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북한측이 될수록 빨리 이 교섭을 타결시키고 싶다면 그럴수록 핵의혹의 해명이라든가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서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북한교섭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어쨌든간에 일·북한교섭만이 앞질러 진전되어 조기타결을 본다고는 생각

할 수 없으며 일·북한교섭이 타결될 때에는 남북간에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핵의혹도 해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번에는 한일관계가 긴장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 일·북한교섭이 타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일조약과 똑같은 형태로 틀림없이 일·북한조약이 필요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본과의 사이에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차승인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일본이 한일조약에 이어 일·북한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드시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조약체결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점에서 번잡스러운 교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소공동선언을 본따서 북한측이 공동선언방식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경제협력」문제의 교섭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공동선언방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그밖의 문제는 그후의 실무적 교섭에 맡긴다는 방식이 모색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

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자금의 조기도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테면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는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이외에 기본관계조약, 어업협정, 재일한국인의 지위협정, 문화재·문화협력협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이것은 독도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 그밖에 여러가지 외교문서가 일괄해서 조인되었는데 일·북한간에는 그런 일은 생각되기 어렵지 않을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동선언방식에 의거한다고 해도 2년정도의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며 그후 몇해안에 남겨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취해져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 **1995년까지 「2+4」가 성립**

남북대화와 일·북한교섭은 병행해서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외교접전과 남북대화 사이의 왕복운동은 아무리 빨라도 1991년 가을의 UN총회때까지, 어쩌면 1992년까지 미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이 제 1 단계가 된다. 그리고 1993년부터 95년까지가 제 2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 일·북한간에는 국교가 수립되고 그후 여러가지 교류가 진전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에는 노태우·김일성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그 회담에서의 1차적 합의에 따라서 그후 남북한의 기본적인 관계가 마무리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1993년부터 95년까지의 과정이 아닐까?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정세는 1992년을 하나의 전기로 하여 95년을 다음 목표로 하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의 정치적 타협, 즉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한다면 현재의 남북총리회담이 성숙한 단계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의 회담에서 모든 것을 합의할 필요는 없고 아마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총리회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 이를테면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과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관계합의서를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동시에 채택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1972년에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남북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간에 이같은 합의는 최고수뇌 레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앞으로 5년 동안에 크게 변화할 것이다. 늦어도 1992년까지는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어 그후 교차승인의 제2단계, 즉 미국과 중국 두나라의 「상호진출」이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95년까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응하는 식의 국제적인 프레임(frame)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이것을 한반도판 「2+4」라고 부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의 대화와 전승국 4개국의 국제적 협의를 병행하여 독일통일을 완성시켰지만 이와 똑같은 틀(frame) 즉 남북한의 대화와 주변 4개국 즉 미·소·중·일의 국제적 협의가 설정되어 한반도판 「2+4」중에서 긴장완화와 통일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약 5년간에 남북한은 상호승인·교류·협력에 의거한 장기적 공존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남북한관계는 「경쟁적 공존」으로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남북간의 「형식적인 통일」이 실현된 다

음 두가지 체제사이의 교류·협력이 하나하나 축적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에서 10여년에 걸쳐서 진전된 프로세스가 1995년 이후에는 한반도에서도 시작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와같은 「형식적인 통일」이 아니라 민중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이다. 그러나 두가지 체제의 공존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면 결국수록 통일은 평화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측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민중레벨의 통일여망(내셔널리즘)을 장기간에 걸쳐서 억제하여 북한의 체제 존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및 군사적인 보장조치가 고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같은 보장없이 는 북한의 지도자가 자신의 「체제의 안락사」를 가져올 타협에 응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이후의 남북관계는 단순한 「공존과 조정」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경쟁적 공존」이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체제개혁 없이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과 공존할 수는 없을 것이

며 북한이 개방·개혁의 길로 들어서면 남북간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체제개혁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1970년 8월에 박정희 대통령의 「선의를 경쟁」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한국이 6공화국 수립이후 개시한 체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독처럼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성공하고 더구나 북한의 체제개혁이 순조롭게 진전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그럴수록 무난하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 일에 실패하면 그후의 사태는 독일형의 흡수통합이라는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의 체제개혁의 곤란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김일성주석이 건재한 동안에 시작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일본이 주는 것은 「기회」와 「시간」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공존과 조정」의 과정이 바로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경제협력」이 북한에 도입되는 과정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일시적으로나마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



여 공존체제의 정비라든가 체제개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외개방이라든가 경제체제개혁을 계속 거절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윽고 남북간의 정치·경제적 격차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루마니아형 비극에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북한교섭의 타결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자금과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는 북한 자신의 문제이다. 일본으로서는 프로젝트주의의 원칙을 고수하여 그것이 군사력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만약 그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북한이 개방·개혁의 길을 나아가면 남북관계는 그만큼 안정된 것이 될 것이다. 어쨌든간에 두가지 체제의 당분간의 「공존과 조정」은 평화통일을 위한 불가결의 과정이며 일본에서 이 전되는 자본과 기술은 이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기회」와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경제발전과 정치적안정을 양립시켜 한국과의 장기적인 공존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성

공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예측못한다. 북한이 개방·개혁에 소극적이라든가 더구나 도중에 실패하여 김일성 이후에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개방·개혁의 노력이 지도부내에서 정책논쟁을 초래하여 그것이 권력투쟁으로 발전하고 폭력적인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1996년 이후가 될 것이다.

**向後 5年間の  
日・北韓關係を展望해 본다**

---

1991年 6月 13日 印刷

1991年 6月 17日 發行

發行處：統一院 統一政策室

印 刷：輝文印刷株式會社

---

(統政 91-6-34)